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의 새 시대를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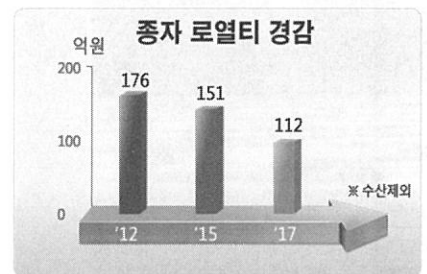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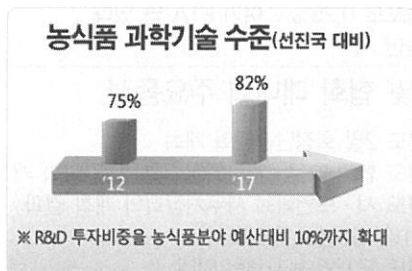
-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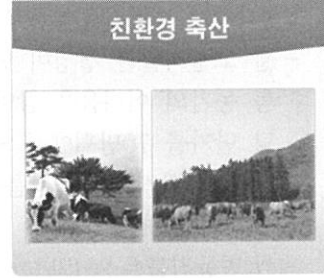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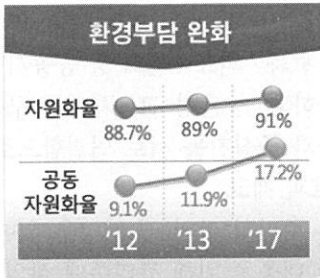
1. 농식품 산업에 창조경제를 접목하겠습니다.

- ◆ 농식품 예산 대비 R&D 투자 비중을 10%로 확대(2012: 5% → 2017: 10%)
- ◆ 「농촌산업지원특별법」 제정 / 친환경 축산단지 시범 조성

- R&D 투자 비중을 농식품 분야 예산 대비 10%까지 확대하고 종자 로열티 경감에 필요한 방사선육종연구센터(2013년 완공) 등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여 과학기술로 농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 이를 위해 국민체감형 R&D 로드맵 마련 및 ‘신기술 인증제’ 등 실용화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골든 씨드 프로젝트 20개 품목별(벼, 감자, 토마토, 돼지 등) 상세 계획 수립, 채소·종축 등 5개 연구사업단 구성 및 연구 착수



- 농업 생산을 유통·가공·관광 등과 결합하는 6차 산업화 추진
 - 공동가공센터 설치, 농공상 융합형 기업 지원 등을 통해 농업인의 식품 가공 분야 참여 확대
 - 체험 휴양마을을 지정(700개소 → 800개소), 농촌 관광사업 등급제 시행(3월), 인성학교 지정(50개소) 등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해 농촌 관광 활성화
 - 이를 위해 6차 산업 및 일자리 창출 종합 대책 마련, 6차 산업 종합 육성·지원을 위한 「농촌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 축산업을 지속가능한 친환경산업으로 탈바꿈
 - 가축분뇨 자원화 증장기 대책을 수립하여 가축분뇨를 고품질 퇴액비 제조와 에너지 생산에 활용함으로써 환경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자원화율을 2012년 9.1%에서 2013년 11.9%, 2017년 17.2%까지 제고



- 사육관리 선진화를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강화(3,880억원 → 4,325억원) 및 자동급이기 등 IT와 결합한 선진 모델 도입
- 산지 축산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TF(관계기관, 전문가 참여) 구성하고, 균유지, 간척지 등에 친환경 축산단지 시범 조성(5개소, 개소 당 10ha 이상)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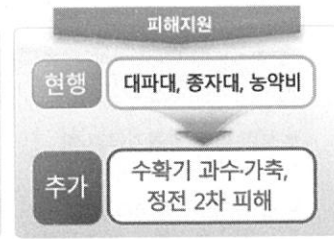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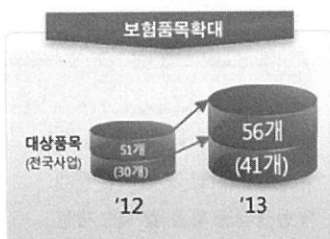
-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산업 발전대책 및 조사료 증산대책 마련
- 농자재 공급업체의 담합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새로운 제도 도입 방안 협의

- 재해를 입은 농업인이 빠른 시일 내에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
 -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을 51개에서 56개로 확대하고, 피해 조사기간을 7~10일에서 3~5일로 대폭 단축, 이를 위해 농업재해보험제도 개편방안 확정 및 농업재해보험법 개정 추진
 - 현재 대파대, 종자대 등 직접적인 피해로 지원을 한정하는 것을 수확기 과수와 가축 피해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소방방재청 등과 협의하여 관련 규정 개정 추진

2. 튼튼한 농가 소득 ·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 농업재해보험 대폭 개편 / 직접지불제 확충

- 농업경영비에서 24%나 차지하는 농자재 비용부담을 사료 · 농기계 · 유류 지원을 통해 최대한 절감



- 고정직불제, 변동직불제 등 직접지불제 확충
 - 쌀 고정직불은 경영비 인상, 물가상승 등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1헥타르 당 단가를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하고, 밭직불은 대상품목을 19개에서 26개로 확대
 - 쌀 변동직불은 2012년까지 적용해온 목표가격을 재검토하여 현행 법 규정에 따른 정부안을 확정하고, 4월 중 변경동의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
 - 농업수입 보장보험 도상 연습 실시(3월), 농업·농촌 환경프로그램 도입 등을 위한 연구도 병행

3.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 농촌 맞춤형 사회 안전망 구축 / '함께하는 우리 농촌 운동' 확산

-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 추진
 - 농촌에는 석면 비산 가능성이 높은 오래된 주거용 슬레이트 건축물이 약 42만 동이나 되며, 교육·의료·교통 여건도 도시에 비해 열악한 상황
 - 마을 단위에는 주거 등 기초생활 인프라

를 개선하고, 읍·면 등 중심지는 교육·보육·의료·문화 등 공공서비스를 확충하되, 농촌형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마을과 중심지를 서로 연결함으로써 투자 효과 제고

-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총리주재 삶의 질 위원회(4월)를 통해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세부계획 확정
- 고령화·과소화 되어 가는 농촌의 특성에 알맞은 맞춤형 복지 추진
 - 농업인에게는 연금보험료, 안전재해보험, 영농·가사도우미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인 질환 연구·치료를 위한 농업안전보건센터(5개소) 신규 운영
 -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인에 대한 농지연금,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조성(4개소),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 등 병행
 - 맞춤형 복지 추진을 위해 부처 공동으로 농촌 복지 실태 조사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법」 제정 추진
 -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함께하는 우리 농촌 운동'을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확산
 - 주민 스스로 경관, 전통·문화 등 마을의 고유한 자원을 발굴하여 색깔 있는

주민 주도로 도시민과 함께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주도 지역 발전

- 색깔 마을 만들기(3천개)
 - 체험관광, 문화마을 등
- 공동경영체 육성(3천개)
 - 들녘별 경영체, 공동제회사

도시민 참여

- 도시자본기술경험활용일자리(일터)
- 농촌 생활환경 개선(샬터)
- 지역축제, 치유의 숲 등(쉼터)

추진체계

- 안전행정부 등 범정부적 참여
- 주민·도시민 등 범국민 운동
- 인센티브 제공 및 제도개선

마을(3천개)을 만들고, 공동체 경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도시민의 자본·기술·경험이 농촌의 활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촌을 도시민이 찾고 싶어 하는 일터, 삶터, 쉼터로 조성
-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주민·도시민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운동 추진 및 도시의 인재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대책 마련

4. 소비자, 생산자가 모두 만족하는 유통구조를 만들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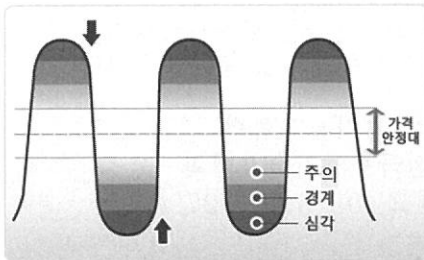
- ◆ 직거래 지원센터 운영, 직매장·대규모 직거래 장터 개설
- ◆ 수급조절 매뉴얼 마련, 수급조절위원회 설치·운영

- 생산자단체 중심의 조직화·규모화·계열화를 강력히 추진하여 농업인은 더 받고(5% 이상), 소비자는 덜 내는(10% 이상) 유통구조 마련
 - 농협 중심 계열화를 위해 산지에는 전속 출하조직 육성, 대도시에는 도매물류센터 확충(6월 안성, 2014년 밀양, 2015

년 강원·장성·제주), 소비지에는 계통 및 대외 판매채널 확대를 통한 판매기능 강화 추진

- 직거래 확대를 위해 4월부터 직거래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직매장(20개소 → 100개소), 대규모 직거래 장터(1개소 → 10개소) 개설도 지속 추진
- 도매시장은 5월까지 정가 수의거래 확대방안 및 전국 32개 공영 도매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 기본계획 마련
- 이를 통해 농협 유통 비중과 직거래 유통 비중은 현재 12%, 4%에서 각각 2016년 20%, 10%로 늘고 도매시장 유통 비중은 현재 53%에서 40%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가격 급등락이 심한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안정대를 설정하고, 가격 변동 수준에 따라 정부가 취해야할 조치를 매뉴얼화
 - 가격안정대 내에서는 생산자의 자구 노력과 소비자의 이해를 바탕으로 대응하고, 가격안정대를 벗어나면 정부의 역할을 통해 가격안정
 - 이런 시스템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해와 합의 도출을 위해 각계의 지혜를 모을 수급조절위원회 설치·운영



가격 급등시	심각	해외물량 도입, 관세인하
	경계	물량공급, 저율관세 증량
	주의	산지 점검, 시장조사
가격 급락시	주의	산지 점검, 시장조사
	경계	저율관세 수입 연기, 가공용 확대
	심각	생산감축, 시장격리, 소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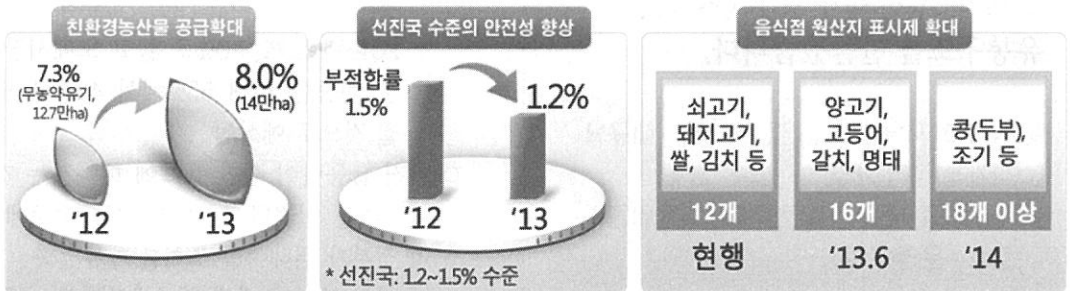
※ 품목에 따라 일정한 band 내 가격변동시 수입 등 직접적인 시장개입 지양

5. 안전한 농축산물을 공급하겠습니다.

◆ 생산단계의 안전한 농식품 공급 및 식약처와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지난해 7.3%에서 올해는 8%까지 확대하고, 안전성 부적합률은 1.5%에서 1.2%로 낮추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대상품목을 12개에서 16개로 확대 추진

- 농산물 우수관리제도에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육성(40천 농가 → 45천 농가) 및 위생 수준을 갖춘 유통시설 확충(718개소 → 800개소) 추진
- 식약처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농식품부는 농산물 안전생산·질병 및 품질관리 강화
- 식품 안전사고 대응 및 식품규제 합리화 등을 논의하는 관련 부처 상설협의체 구성(4월) 및 식품종합정보망 구축(9월) 추진 ㉞



연회비 미납 회원분들께 알립니다~!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정(연)회원 여러분!
 더욱 발전하는 협회와 회보발간을 위하여 년 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1년 구독 기간이 완료 되신 회원분들은 아래의 계좌로 송금을 부탁드립니다.

농협 1394-01-000536 예금주 :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제일은행 327-20-016036 예금주 :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송금 후 성명, 전화번호를 본회로 알려주세요. 02-794-7270)

※ 『농업기술회보』 구독 1년이 지난 정(연)회원 일 경우, 회비 : 10,000원
 평생구독을 원하실 경우, 동심회비 : 100,000원입니다.

본회의 회원은 통일회원, 동심(평생)회원, 정(연)회원으로